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인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06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11. 3.

발 의 자 : 이인선 · 백종현 · 김승수
윤두현 · 노용호 · 서일준
윤영석 · 최승재 · 김상훈
이종성 · 박성민 · 박대출
조은희 · 양금희 · 하영제
김성원 · 태영호 · 최영희
金炳旭 · 윤재옥 · 이채익
전주혜 · 정경희 · 조해진
정우택 · 박정하 · 전봉민
안병길 · 이철규 · 강기윤
이양수 · 권명호 의원
(3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기업 간의 납품대금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바탕으로 운용되는 상생결제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기업 간의 수탁·위탁거래뿐만 아니라 「국가재정법」에 따른 중앙관서 및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공공부문”이라 한다)와 중소기업 간의 거래를 포함하고 있음.

그런데 교육청의 경우 중소기업과의 수탁·위탁거래 규모가 상당함에

도 불구하고, 현행법상 상생결제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공공부문에 교육청을 추가하여 상생결제를 활성화하고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8호의3).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8호의3 중 “지방자치단체”를 “지방자치단체(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교육청의 상생결제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제8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수탁·위탁거래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8의2. (생략) 8의3. “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생결제”란 「국가재정법」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에 따른 <u>지방자치단체</u> 가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생결제 방식으로 제22조제6항에 따라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. 9. ~ 11. (생략)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8의2. (현행과 같음) 8의3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지방자치단체(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</u> ----- ----- -----. 9. ~ 11. (현행과 같음)